




	실 장	요 약 전		실 장
공보비서관			수석비서관	
				
국 무 총 리 실			대 통 령 비 서 실	

**사이비언론 근절대책을 위한 국무총리 특별지시**

○ 지시내용

- 사이비언론 척결을 위해 공직사회부터 언론의 부당한 압력이나 이권개입을 단호히 거부하고, 타인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주저없이 「사이비기자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와 개선노력을 당부

○ 대상 : 전공직자

○ 지시방법

- 공보처에서 각급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에게 직접 국무총리 지시공한과 함께 공문시달
- 각급 행정기관의장은 반드시 소속기관에게 시달함과  
동시 공직자는 모두 숙지토록함.

# 공 보 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 전화 (02)720-3825

문서번호 신일84600-532

시행일자 1993. 5. 20( )

수신 수신처참조

참조

선 결			지 시		
접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수	번호				
처리과					
담당자					

제 목 사이비언론 근절대책을 위한 특별지시(국무총리지시 제1993-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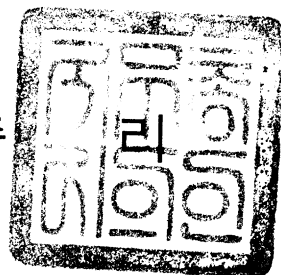
정부는 최근 우리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사이비기자과 사이비언론을 한국병의  
치유차원에서 범정부적으로 단호히 척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사이비언론을 근원적으로 척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공직사회부터 더이상  
사이비언론이 발붙일 수 없는 밝고 건강한 풍토 조성예 앞장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이비언론 근절대책을 위한 국무총리 특별지시 공한을 별첨과 같이  
시달하니 각급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을 포함하여 모든 공무원에게 이를 반드시 주지  
시켜 그 실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이비언론 근절대책을 위한 특별지시 1부. 끝.

국 무 총



수신처 : 가(-01~06), 나, 다

## 사이비언론 근절대책을 위한 특별지시

정부는 최근 우리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사이비언론(기자)의 병폐를 한국병 치유차원에서 단호히 척결키로 하고 지난 4.12 사이비언론 근절대책을 밝힌 바 있습니다.

언론자유에 편승한 사이비언론의 갖가지 비리와 부조리는 건전언론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생활에는 물론 국가, 공공기관 및 공직자에게까지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각종 인·허가나 공사수주 및 구매계약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이비언론이 개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거나 이들의 행태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방관자적 위치에 있었지는 않았는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구시대의 때를 말끔히 씻어내고 모두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개혁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더이상 사이비언론이 발붙일 수 없는 밝고 건강한 공직사회풍토 조성에 앞장 서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이나 공직자들은 업무와 관련하여 언론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나 이권개입, 간행물의 강매나 광고강요등이 있을 때에는 공직자 스스로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이들 사이버언론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거나 타인의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주저없이 "사이비기자 신고센터"에 신고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이버언론과의 부당한 유착관계를 과감히 청산하는등 과거의 잘못된 대 언론관행도 차제에 시정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자와 건전언론의 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직사회가 사이버언론을 척결하는데 앞장서도록 합시다.

우리 사회로부터 사이버언론을 완전 추방하는 것이 국민생활을 보호하고 건전언론의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공직자 여러분이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